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내 읍면동중 60.6%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조사됐다. 성장잠재력은 타 경제권역에 비해 낮게 평가된 가운데 혁신기반과 미래 산업기반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민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동남권 핵심공약의 실현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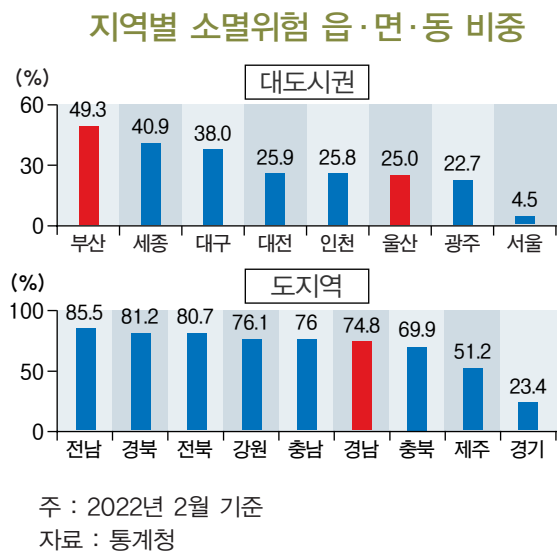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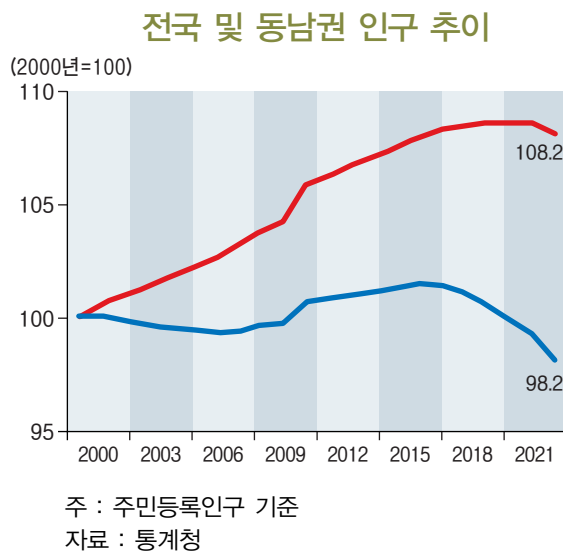
신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여야 합의와 공감대 이뤄진 정책의 경우 조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시키고 정책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인구 감소 가속화, 절반이상 지역이 인구소멸위험 가능성

동남권 인구는 2016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¹⁾. 2021년에는 2000년 대비 -1.8% 감소한 779만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인구의 경우 같은기간 8.2% 증가하면서 5,164만명까지 늘어났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동남권 지역중 절반이상이 소멸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소멸위험지수²⁾가 0.5 미만인 곳을 의미한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동남권 566개 읍면동중 60.6%에 해당하는 343개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³⁾.

지역별 소멸위험 읍면동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은 8대 광역·특별시중 가장 높은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74.8%를 기록하며 대부분의 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울산의 경우 서울(4.5%), 광주(22.7%) 다음으로 낮은 25.0%로 조사됐다⁴⁾.



1) 2016~21년중 동남권 인구 증가율(전년대비, %)

• -0.1(2016년) → -0.4(2017년) → -0.6(2018년) → -0.6(2019년) → -0.7(2020년) → -1.0(2021년)

2)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국내 다수의 기관에서 인구소멸위험 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

3) 시군구별로는 동남권 39개중 43.6%인 17개 시군구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 지역별로는 부산 4개(비중 25.0%), 울산 0개(0.0%), 경남 13개(72.2%)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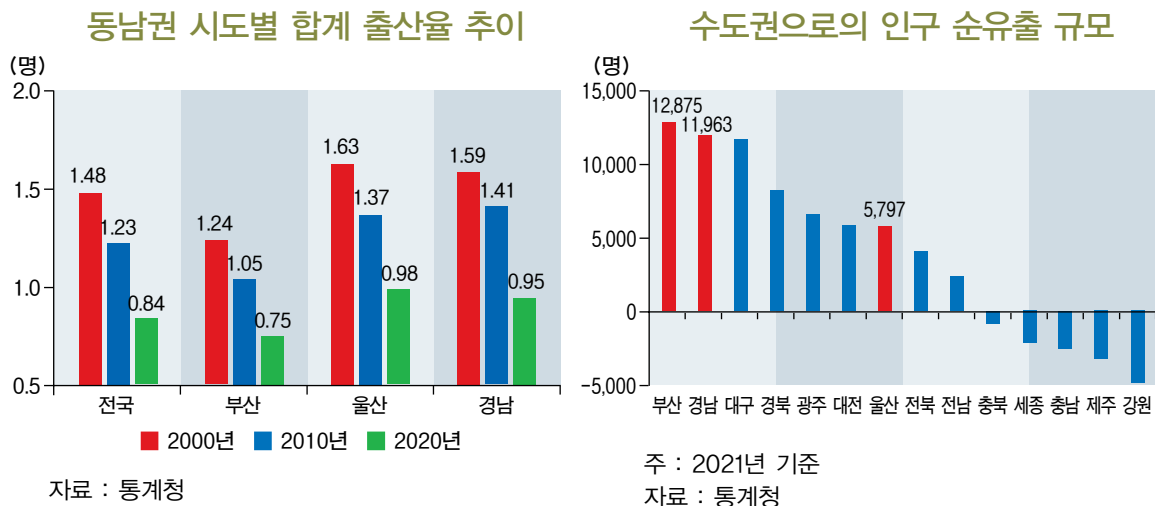
4) 지역별 소멸위험 상위 3대 읍면동은 부산은 중구 남포동, 강서구 가락동, 사상구 모라3동이며 울산은 울주군 삼동면, 울주군 두서면, 울주군 두동면임. 경남은 거창군 가북면, 의령군 굴류면, 거창군 신원면 순. 다만 부산 중구 남포동은 상권중심 지역이라는 특성을 보유한 만큼 타 지역과는 다소 차별적인 해석이 필요

저출산, 고령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세는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 둔화 및 고령화 진전 속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합계출산율⁵⁾의 경우 2000년 1.42명에서 2020년에는 0.87명으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부산(0.75명), 울산(0.98명), 경남(0.95명) 모두 2020년중 1.0명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서울(0.64명)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⁶⁾.

초고령사회로의 진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동남권은 2017년 고령사회 단계에 접어든 이후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⁷⁾. 무엇보다 2040년에는 동남권 전체인구중 1/3을 넘어서는 36.2%가 고령 인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⁸⁾.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타 지역 대비 많은 것도 우려된다. 부산과 경남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2021년중 각각 12,875명과 11,9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시도중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5)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

6) 출생률 하락으로 동남권은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추월하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전국(2020년)보다 이른 2018년 시작.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은 2018년 시작되었으며 울산은 2021년까지 인구 자연증가세 유지

7) 동남권은 고령화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하는 데는 7년이 소요. UN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8) 2021년말 기준 동남권은 전체 인구에서 만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17.1%)을 상회하는 18.5%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20.4%, 울산 13.6%, 경남 18.4%로 조사

성장잠재력 하락하고 혁신성장역량은 미약

지역이 지속성장 경로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동남권은 경제활력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기관 평가에서도 동남권의 성장잠재력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 조사⁹⁾에 따르면 동남권은 6개 경제권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0년 4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이는 세부평가 지표중 인적자본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이 경제권역중 최하위를 기록한 데 주로 기인한다. 전문직 종사자수 비중이 작고, 청년층의 순유출이 많은 것 등이 인적자본 역량 순위가 최하위에 머문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외국인 인구비중이 낮고 의료·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활동 여건이 부실한 것 등이 지역사회 역량 순위가 낮은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제권역별 성장잠재력지수

지역	2010년		2020년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수도권	2	1.062	1	1.199
충청권	1	1.080	2	1.177
강원제주권	6	0.854	3	0.991
호남권	5	0.891	4	0.951
대경권	3	0.921	5	0.871
동남권	4	0.916	6	0.867

자료 : 산업연구원

성장잠재력지수 평가요소별 동남권 순위

구성요소	핵심지표	순위
지역성장 성과	- 1인당 GRDP	5
기업·산업 역량	- 중규모이상·고성장기업비중 - 지식기반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4
인적자본 역량	- 전문직이상 종사자수 비중 - 청년층 5년간 순이동 인구수	6
지역혁신 역량	- GRDP대비 R&D투자비중 - 사업체수 천개당 지식재산권수	4
지역사회 역량	- 주민등록인구대비 외국인 비중 -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 기업활동 여건 평가지수	6

주 : 2020년 기준 순위

자료 :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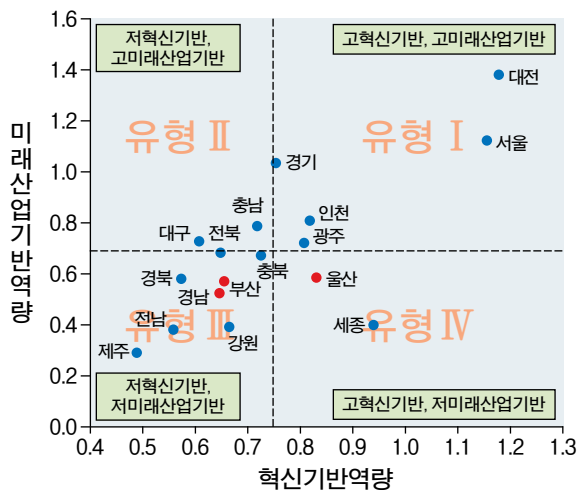
9) 성장잠재력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요인의 총체로서 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성장잠재력지수(Regional Growth Potential Index)는 지역성장성과, 기업·산업 역량, 인적자본 역량, 지역혁신 역량, 지역사회 역량 등을 통해 미래성장 역량을 수치화한 것. 지수가 1을 넘으면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역량, 1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

지역혁신성장 역량평가 종합순위에서도 동남권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남과 부산은 17개 시도중 각각 13위와 12위, 울산은 7위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성장 역량은 사람·교육, R&D, 창업, 신산업기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혁신기반과 미래산업기반을 지수화한 것이다¹⁰⁾.

유형별 지역혁신성장 역량 분석¹¹⁾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은 충북,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강원 등과 함께 유형 Ⅲ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반 역량과 미래산업기반 역량이 모두 낮다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의 혁신기반 역량은 각각 11위, 13위이며 미래산업기반 역량은 각각 12위, 13위로 평가됐다.

울산의 경우 세종과 함께 혁신기반 역량(4위)은 높으나 미래산업기반 역량(10위)은 낮은 유형 Ⅳ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광주는 혁신기반 역량과 미래산업기반 역량이 모두 잘 구축된 유형 Ⅰ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성장역량 유형



주: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
자료: 산업연구원

세부항목별 지역혁신성장역량

구분	종합 지수	지역혁신성장역량	
		혁신 기반역량	미래산업 기반역량
울산	7위	4위	10위
부산	12위	11위	12위
경남	13위	13위	13위

자료: 산업연구원

10) 지역혁신성장역량은 지식창출·중개·성과 등 R&D 부문과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융합기술 등 신산업기반 부문을 중심으로 산출된 지표. 세부지표인 혁신기반역량은 R&D인력, R&D투자, 산학연계, 지적재산권, SCI 논문, 미래인재, 고학력자 등과 관련한 지표로 지수를 산출하며 미래산업기반 역량은 창업강좌, 엔젤투자, 벤처기업, 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한 지표로 지수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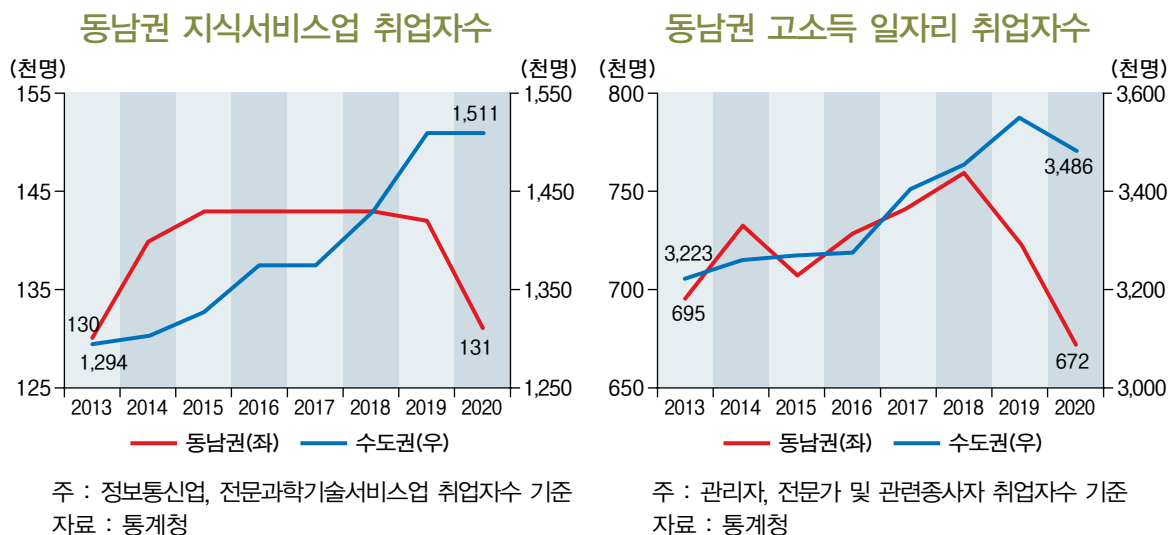
11) 혁신기반·미래산업기반을 평가한 지역혁신성장역량 지수를 토대로 지역을 유형화한 것으로 각 요인의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 가령 유형 Ⅰ은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며 유형 Ⅲ은 혁신기반 역량과 미래산업기반 역량이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을 의미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민간투자 활력도 약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장과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재유출(Brain drain)을 막고 인재유입(Brain gain)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남권의 경우 전체 취업자수 증가세¹²⁾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지식서비스업, 고소득 일자리 등 인재유입을 촉진할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가 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년중 동남권의 지식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3만명에서 13만 1천명으로 0.8% 증가에 그쳐 수도권(16.8%) 증가세를 크게 하회했다. 또한 관리자·전문가 등 고소득 일자리 취업자수는 69만 5천명에서 67만 2천명으로 -3.3%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고소득 일자리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322만 3천명에서 348만 6천명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인적자본 투입은 지역 생산성 증대와 혁신성장의 중요 기반이다. 따라서 지역 전반의 일자리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2) 2013~21년중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은 동남권은 2.0%, 전국은 9.2%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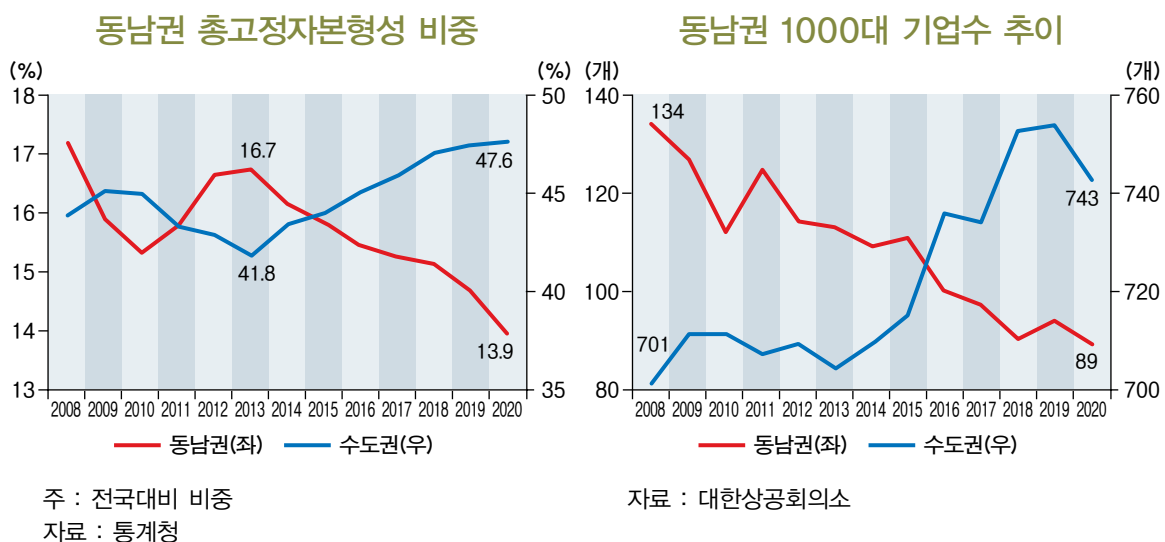
13) 유형별 취업자수 변화(2020년 기준, 괄호 안은 2013년 대비 증가율)

구 분	전체 취업자수	특성별 취업자수	
		지식서비스업 취업자수	고소득 취업자수
동남권	390.6 (0.5)	13.1 (0.8)	67.2 (-3.3)
수도권	1,345.7 (5.9)	151.1 (16.8)	348.6 (8.2)
전국	2,682.5 (4.9)	199.8 (16.0)	582.5 (8.3)

투자기반 조성도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이다. 특히 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적 성장경로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민간부문 투자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지방투자 활성화¹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투자 수준 및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동남권의 전국대비 총고정자본형성¹⁵⁾ 비중은 2013년 16.7%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3.9%까지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같은기간 41.8%에서 47.6%까지 상승하며 투자집중 현상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투자 부진은 대기업 및 혁신기업 부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¹⁶⁾. 특히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입지하면서 투자활동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1,000대 기업중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은 2008년 701개에서 2020년 743개로 증가한 반면 동남권의 경우 같은기간 134개에서 89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¹⁷⁾.



14) 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2011년부터는 신·중설 투자에도 보조금 지원하는 등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에 노력

15)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무형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총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하며 취득을 위해 지출된 금액으로 그 규모를 측정

16) 국내 창업기업 중 동남권 입지 기업 비중(2019년 기준)은 12.9%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54.8%에 달함

17) 동남권 및 시도별 1,000대 기업 입지 비중(2020년 기준, 개, %)

• 동남권 : 89(8.9) • 부산 : 29(2.9) • 울산 : 23(2.3) • 경남 : 37(3.7)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지역발전정책 필요

국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16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 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등 제도적 기반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이전 등이 적극 추진됐기 때문이다.

17대 정부에서도 5+2 광역경제권, 지방소비세 도입, 포괄보조금 도입 등을 제시하며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강조했다. 18대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을 기반으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19대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등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을 계승 및 보완해 나가면서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힘썼다.

역대 정부들이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득, 투자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목표 및 주요정책

구분	제16대 (2002~2007)	제17대 (2007~2012)	제18대 (2012~2017)	제19대 (2017~)
정책 목표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주요 정책	• 혁신정책(지역혁신체계 구축, NURI사업 등) • 균형정책(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 산업정책(지역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 공간정책(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 질적발전정책(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5+2광역경제권 등) • 신성장동력발굴·지역특화발전(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 •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지방소비세, 포괄보조금 등) •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지역상생발전기금 등) •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발전·보완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지역 주도 협력사업 등)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력 제고(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 교육여건개선·창의적인재양성(지방대학 명품대학 육성 등) • 지역문화 융성·생태복원(문화접근성 제고, 농업유산 등) •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 사람 분야 정책(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 활용 문화·관광, 보건·복지체계 구축) • 공간 분야 정책(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 거주강소지역화) • 산업 분야 정책(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한계	수도권 집중 지속 및 지역격차 심화로 지역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인식	낮은 국민적 체감도, 성과 창출 지연, 국민적 소통 부족 등	지역의 자발적 협력 부족, 생활인프라 취약지역 상존, 정책간 연계 부족 등	수도권 인구 50% 초과, 지역 주도 혁신체계 활성화 미흡 등

자료 : 산업연구원

신정부 출범초기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 중요

올해 5월 출범예정인 신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한 지방자치, 교통혁신, 농산어촌 발전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성장 구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부산은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건설 등으로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울산은 산업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살고싶은 산업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의 경우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 등을 통해 국가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형 인프라 조성, 핵심기관 이전 및 신설,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동남권의 미래를 완전히 변모시키고 지역경제 재도약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¹⁸⁾.

신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여야 합의와 공감대 이뤄진 정책의 경우 초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시장에 재확인시키고 정책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8) 최근 인수위가 개최한 균형발전·자치분권 분야 전문가 초청 첫 워크숍에서는 부총리급 '지방원' 신설, 초광역 지자체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의 제안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

[참고] 국민의힘 동남권 대선공약

지역	공약	세부내용
부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 가덕도 신공항, 연계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 55보급창 및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북항 1,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 자성대~부산시민공원 간 도심일원 대개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 가칭 '부산가덕도공항운영공항공사' 설립 •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경부선 지하화 · 광역교통망 확충	• 경부선 철도(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가야차량기지 10.7km) 지하화 • 부울경 GTX (부산~마산 간 광역급행철도) 건설 •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가야철도기지창 스마트도시 조성 •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경부선 냉정~범일 구간 이설 • 황령산 제3터널, 반송터널, 도시철도 중구순환선 영도트램 추진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오시리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 공공의료망 확충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 24시간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완성
	KDB산업은행 이전 · 디지털 융복합 허브	•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 동남권 파워반도체 S벨트 구축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 동남권 ICT 트라이앵글(사상 ICT 융합 · 센텀스마트 · 영도해양 ICT클러스터) • 동남권 디지털혁신파크 및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 해양금융 중심도시	•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 •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 육성 • 을숙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등 연계한 그린 스마트 파크시티 조성 • 마린 바이오(해양의약품,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 산업 특화 지원 강화 •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해양금융 · 해운기업 클러스터 구축
울산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	• 낙동강 르네상스 추진 위한 부산도시국가정원 지원 • 부산 UN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추진 • 웰니스 의료관광허브 조성 • 북항 유라시아 컬처플랫폼 조성 • 남항 마린토피아(Marine-Topia) 추진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 조선 ·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항공 · 철도 · 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 대중교통 혁명, 도시철도(트램) 건설 •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노선 추가 신설 •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영촌교 건설 • 울산권 광역철도(동남권 순환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완공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UNIST 의과학원 설립, 의료복합타운 건설 • 도심권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건립 검토 •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추진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 깨끗한 식수 확보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위조절 문제 동시 해결 • 수위조절 연구용역 착수, 운문댐 물 확보와 시설관로 설치
	종합대학 울산 유치	• 종합대학 울산 유치 • 대학 이전 유치 지역 인근 신도시 조성
경남	청년U턴 젊은 도시 조성	• 청년 취업 ·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시균형 성장축 강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광역시장 권한 확대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산업 복원 · 육성 • 국내외 SMR 핵심 기자재 제작 ·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적극 지원
	항공우주청 설립 ·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 항공우주청 설립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 스마트 대형항만 진해신항 조기 착공 • 경남항만공사 설립 및 스마트 물류도시 조성 •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및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구축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첨단산업 육성	• 조선업 스마트야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 클러스터 구축 •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 국방 MRO 교육센터 유치 • 경남형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구축 •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경남	광역교통망 확충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및 거제역~가덕신공항까지 연장 • 경 · 부 · 울 광역철도망 구축,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 거가대교 ·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 산업 · 관광 거점 연계 광역도로망 확대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 법학전문대학원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및 아세안공학기술원(AIT) 설립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화 • 경남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체인 구축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조성 • 통영 국제 해양관광마리나 허브 조성
	공공의료망 확충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 서부경남 의료복합타운 조성 •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및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국립 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 • 수산자원조성 복합센터 건립 • 국가기록원 안전기록관 설립

자료 : 국민의힘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방안,” 2021.6

_____, “지역성장잠재력 분석과 지역산업 정책 과제,” 2022.3

_____,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2021.12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3

한국은행, “인구구조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2018.2

국민의힘, www.peoplepowerparty.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통계청, www.kosis.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향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씨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3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3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